

[서식 예] 토지소유권 확인의 소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 전화·휴대폰번호:
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 피 고 대한민국
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◇◇◇◇

토지소유권확인의 소

청 구 취 지

1.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200㎡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.
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200㎡(다음부터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고 함)는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●●●가 사정 받은 소외 망 ●●●의 소유의 토지였는데, 소외 망 ●●●는 19○○. ○. ○. 사망하여 소외 망 ●●●의 아들로서 단독상속인인 원고가 상속하였습니다.
2. 그런데 피고 산하 토지대장 소관청은 토지대장에 소유자 성명 ●●●만 기재되어 있고 소외 망 ●●●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다투고 있습니다.
3.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.

입 증 방 법

- | | |
|-----------|--|
| 1. 갑 제1호증 | 기본증명서(망 ●●●●)
(단, 2007.12.31.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) |
| 1. 갑 제2호증 | 가족관계증명서(망 ●●●●)
(또는,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) |
| 1. 갑 제3호증 | 토지대장등본 |

첨 부 서 류

- | | |
|-----------|------|
| 1. 위 입증방법 | 각 1통 |
| 1. 소장부분 | 1통 |
| 1. 송달료납부서 | 1통 |

20○○. ○. ○.

위 원고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 기간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분 제출		
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· 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 		
불복절차 및 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 	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,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, 더욱이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그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,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음.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자가 「○○리 이○○」이라고만 등재되어 있고 국가가 위 「○○리 이○○」과 원고들의 피상속인 「이○○」이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는 경우,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(대법원 2001. 7. 10. 선고 99다34390 판결). ·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,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,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·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음(대법원 1997. 6. 10. 선고 96다25449 판결). ·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용토지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특정할 수 없어, 이러한 임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, 한 필지의 임야가 두 필 이상의 임야로 분할되어 구 지번 표시에 의하여 분할 전 임야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분할 후의 임야에 대하여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, 지적 등의 확정절차가 없는 이상 구 지번을 표시하고 등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, 구 지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(대법원 1996. 7. 30. 선고 95다14794 판결). 		

※ (1) 관 할

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(법무부) 또는 대법원의 소재지에 의함.
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

수 있음.

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국가의 소송에 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인 법
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
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
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
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
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
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
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
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
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확인 및 형성의 소